

CNN, 2025. 5. 20.

AI 규제 전쟁: 백악관의 '기술 우선주의' vs. 100개 시민단체의 경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연방 규제를 철회하고 주 정부의 AI 규제 권한을 10년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기획



시민단체와 학계는 이 법안이 고위험 AI의 기업 책임을 면제해 고용, 의료 등 사회전반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

▶ 규제 중단' 카드를 꺼낸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발의한 대규모 세출 삭감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는 AI 규제와 관련한 논란의 조항, 주 정부가 인공지능 모델이나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10년간 규제하거나 관련 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AI가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주 정부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AI 선두 유지라는 행정부의 기술 우선주의를 보여준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바이든 시대의 AI 안전장치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AI 칩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대폭 줄였다.

▶ 100개 시민단체의 반격: "면죄부가 될 것"

이러한 연방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141명의 서명인을 포함한 100여 개 이상의 기관이 우려를 담은 서한을 하원 의원들에게 전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 10년간의 규제 금지 기간 동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오작동으로 인해 해를 끼친 회사들이 이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는 빅테크를 위한 면죄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명에는 여러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Amazon 및 Alphabet 노동조합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AI 개발의 미래에 대한 뿌리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 선두에 선 주(州) 정부와 규제 딜레마

연방 정부의 광범위한 가이드라인 부재 속에서 콜로라도, 뉴저지, 오하이오 등 여러 주는 고위험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예를 들어 콜로라도는 고용 등 중대한 결정에서의 알고리즘 차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포괄적 AI 법률을 통과시켰고, 뉴저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AI 생성 딥페이크 콘텐츠 배포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을 신설했다. 의회에서 일부 AI 응용 분야의 규제 필요성에는 초당적 합의가 이뤄졌으며, 최근 비동의 AI 생성 성적 이미지 금지 법안이 양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들은 주별로 상이한 규제 체계가 혼란을 낳는다며 연방 차원의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OpenAI CEO Sam Altman 역시 AI의 위험 완화를 위한 정부 규제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기업들이 법적 명확성 속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연방 규제 기관의 역할을 촉구했다.

5월의 용어 자동화된 의사결정, AI 책임성

출처: 1) CNN(2025. 5. 20), House Republicans want to stop states from regulating AI. More than 100 organizations are pushing back.

2) AP(2025. 05. 17), House Republicans include a 10-year ban on US states regulating AI in 'big, beautiful' bill.